

# “농수축산 지원 추경예산 증액하라”

### 김영록 의원 등 농어촌 의원 39명 3,166억 추가 편성 요구

### 비료 가격 200억 지원·축산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주장도

국회 농어촌 지역구 의원 39명은 3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166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농어촌 의원

39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위 소관) 정부 추경안 5천850억원에 3천166억원을 추가, 총 9천166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농민들이 비료값 인상분의 10%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농가 회생을 위해 축산소득안정 직불제 도입과 송아지 생활안전지원금 한도 인상 등의 대책을 위해 2천501억원의 축산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국회 정론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 소관 추경 5천850억원 가운데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하다며 양식이 배합사료 지원, 유류구매자금 지원, 연근해 선박 유류절감 시스템 지원 등을 위해 465

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추경질의에서 수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장태평 장관으로부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농어민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이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추석전 해결을”

### 한나라 '불교계 반발' 후에 조기 해결 촉구

한나라당은 3일 일련의 사건으로 불거진 종교편향을 둘러싼 불교계의 반발이 '국론 분열'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조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청와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박희태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불교계 동향을 청와대에 적극 전달하고,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념간·지역간 갈등이 있어도 종교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사례는 없었다. 유사 이래 종교 문제로 국론이 분열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또 “이 문제를 미연에 막기 위해 당에서는 불교계 의견을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본 역할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요구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이므로 당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개진됐고, 구체적으로 어청수의 사퇴주장은 없었지만 ‘국민 통합’이 중요하며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안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추경예산 심의와 정기국회 회기 도중 의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공기업·SOC 추경 삭둑 잘라내겠다”

### 경기부양에만 초점... 물가상승 부추길 우려 높아 등록금·노인 지원 등 민생예산은 대폭 늘리기로

민주당이 3일 4조9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추경안의 초점이 세 계영여금의 조기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맞춰져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공격하며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비(非)민생’ 예산은 삭둑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등

을 지원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 ‘중산층과 서민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국회에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조9천억원 가운데 민생예산은 5천725억원(1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기업 및 SOC 부문 등에 걸쳐

총 3조4천억원에 대해 손을 댄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경기부양 예산의 삭감과 조정 ▲국가재정법 준수 여부 규명 ▲법적근거가 없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의 삭감과 조정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 등 상임위별 추경 심의기준도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민주당은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 노인 지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 아래 ‘물가안정·서민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각종 서민정책의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구성하자”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에 제안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와 관련,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의총회에서 당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당내 특위 위원장은 박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그는 오전 BBS ‘유용화의 아침저녁’에 출연, “(민주당 안대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전라도, 경상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역감정의 골도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군산과 서천이 조그만 강 또는 항구를 두고 전북, 충남인데 이런 것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

에 명칭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단편의 예처럼 런던시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큰 테두리에서 광역자치권으로 나누는 문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며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함께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으나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 민주당 ‘KBS 대책회의’ 7명 검찰 고발

### 최시중·정정길·이동관씨 등 ‘직권남용’ 혐의

민주당은 지난달 회동에서 KBS 사장 선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7명 전원을 3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 위원장 등이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정을 앞두고 회동, 후임 사장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정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은 민주당 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 3당 공동으

로 이미 요구서를 제출한 국회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이른바 ‘언론장악 음모’를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마련, 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이 반대, 현실적으로 국정 요구서 채택이 힘든 상황에 처하자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배수진을 친데 이어 최 위원장 등을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기국회 중 골프·외유·향응 금지”

### 민주당 ‘행동수칙’ 마련, 군기잡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의원들의 골프와 해외시찰 등을 제한하는 등 대의원 선을 가다듬기 위한 ‘군기잡기’에 나섰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회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마음 가짐을 다지는 의미에서 골프, 해외시찰,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는 정기국회 중 행동수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돼 치르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분회의나 상임위 휴회기간에도 평일골프는 금지되며 국감 기간에는 주말 골프도 안된다”며 “해외시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향응은 절대로 금지된다”며 “위반시에는 경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황산 구화산 장가게

## 장가게

가장 빠르고 편한 직함 결제

다들, 대박! 골목집에 '장가게'를... 100,000원

장사(장가게) 10월 2일 ~	₩ 749,000-	(다들, 대박! 골목집)
황주(황산) 10월 18일 ~	₩ 629,000-	(다들, 대박! 골목집)
황산·구화산(불교성지)	₩ 849,000-	(다들, 대박! 골목집)
상해, 황주, 소주	₩ 499,000-	(다들, 대박! 골목집)

**광주MBC** | ☎062)226-6070